2021년 행정사 제9회(2021.5.29.)

해설 : 이승철

1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① 행정관리설 ② 행정목적실현설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기능설 ⑤ 법함수설

해설

행정법학적 행정개념에 대한 학설(행정과 입법·사법 간 본질적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시각) - 행정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임.

부정설 (법함수설)	법단계설(H. Kelsen)		입법은 헌법의 직접적(1차적) 집행기능, 행정과 사법은 헌법의 간접적(2차적) 집행작용 모두 헌법의 집행기능인 점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으며 담당기관의 양태만 다름
	기관양태설(A. Merkl)		입법은 합의체기관, 사법은 독립체기관(등격·대등관계, 병렬적 복합체), 행정은 상하계층체기관(종속관계)
긍정설 (행정과 입법·사법간 본질적 차이 인정)	소극설(공제설)		행정은 입법, 사법 기능을 제외(공제)한 나머지의 국가 기능
	적극설	(국가)목적실현설(이익설)	국가가 자신의 목적(국익·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
		양태설(성질설, 결과실현설)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지는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

행정학적 행정개념에 대한 학설

행정관리설	행정은 공공사무의 관리(인사·조직·재무관리)	정치·행정2원론
통치기능설	행정은 통치기능=정치기능(정책결정) + 행정기능(정책집행)	정치·행정1원론
행정행태설	행정은 협동적 집단적 의사결정	정치·행정새2원론
발전기능설	행정은 국가발전을 위한 목표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발전정책 및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기능	정치·행정새1원론
정책화기능설	행정은 공공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과정의 일부. 행정의 핵심을 공공정책의 형성(결정) 및 집행으로 보고 정책결정과정상 갈등의 완화와 순기능적 갈등의 조성을 중시	정치·행정새1원론
신행정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	정치·행정새1원론

답 ④

2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1887년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③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 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④ 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⑤ 1940년대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판단적인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해설

① (×) 엽관제 ⇨ 실적주의
② (○) **윌슨(W. Wilson)의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 : 행정학의 효시. 행정은 사무·경영(Business)의 분야, 정치의 영역 밖에 존재, 이미 수립된 법률·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관리·사무·기술체계. 행정학의 독자성 강조.
③ (○) **관리학파로서 정통 행정학 - 행정관리론** : 미국 행정학은 엽관제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치개혁에서 출발해, 과학적 관리법 및 고전적 조직론을 접목하면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했다. 여기에 '절약과 능률(economy & efficiency)'이 좋은 정부의 구현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 개념으로 등장했다. 그리하여 미국 행정학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관리과학' 중심의 정통 행정학으로 모습을 갖추었다. 미국 행정학에서는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해 1910년대 이후 행정 고유 영역의 활동을 규율하는 과학적 원리와 합리적 관리기법을 본격적으로 탐구했다. 당시의 행정이론과 고전적 조직이론이 합류해 '행정관리론'이 등장했다. 이 시기의 미국 행정학은 경영학과 유사했다.
④ (○) 통치기능설 : 행정의 기능을 정책결정 + 정책집행기능으로 파악
⑤ (○) 행태주의의 논리실증주의(가치와 사실의 분리. 가치판단 배제(가치중립, 가치지양, 몰가치성), 사실판단만 연구대상)

답 ①

3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성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④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다.
⑤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선호한다.

해설

① (×) **생산성(능률성)보다는 인간적 가치(민주성) 중시**(Value people, not just productivity)
② (○) **관료의 역할은 시민을 위한 봉사**(service)라고 봄. 관료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촉진하며 시민과 지역공동체 간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야 함. 따라서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정부 규모의 일방적 축소를 지양(止揚)함.

③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적**(The 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 공익은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공익에 대한 담론 중시)

④ (×) **기업가정신보다 citizenship(시민정신·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의 가치 중시**(Value citizenship and public service above entrepreneurship)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신공공서비스론은 재량은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 *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표에서 '행정재량' 부분 참조.

⑤ (×) 기대하는 조직구조 면에서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전통 행정이론의 특징. 신공공서비스론은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를 강조. *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표에서 '기대하는 조직구조' 부분 참조.

답 ②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구분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과 인식의 토대	정치학 및 초기의 사회과학이론	**경제이론**. 실증적 사회과학에 기초한 정교한 토의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해석학·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
합리성모형과 행태모형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인 또는 자기이익에 기초한 의사결정자	**전략적 합리성**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증
공익에 대한 입장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사익의 총합)**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관료의 반응대상	고객(의뢰인)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 공유가치의 창출)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민간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책임에 대한 접근양식	**계층제적·위계적**(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책임 짐)	**시장지향적**(개인 이익의 총화는 시민 또는 고객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 창출)	**책임의 다원성**(공무원은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참여)
행정재량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허용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료에게 **넓은 재량 허용**	**재량은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기본적 통제만을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기제	**임금**과 편익, 공무원보호(**신분보장**)	**기업가 정신.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공익의 실현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신공공서비스론의 7가지 원칙 - 7가지 기본원칙(R. Denhardt와 J. Denhardt)

① **행정의 역할은 방향잡기(조정) 보다는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Serve, rather than steer) : 정부역할은 규칙제정 같은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봉사)에 초점을 두어야 함.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 관련 당사자의 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타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정책에 대한 시각** : 정책은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므로 정부는 사회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하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감내할 필요는 없음.

㉡ **관료역할 - 봉사(service)** : 관료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촉진하며 시민과 지역공동체 간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야 함. 따라서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정부 규모의 일방적 축소를 지양(止揚)함.

②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적**(The 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공익은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공익에 대한 담론 중시) : 물. 행정인은 공익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구축하여 개인적 선택에 의한 빠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이해와 책임을 창조해야 함. 관료는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공동가치를 표현하고 공익에 대한 집단적 의미로 발전시키는 공적 에너지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함.

③ **행정의 활동방식은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Think strategically, act democratically) : 정부는 지역공동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성을 다하도록 지원적·조장적 역할 수행.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심·협력하게 하려면 전략적 사고에 의한 계획과 민주적 실천 필요. ☑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x)

④ **봉사대상은 시민 : 행정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Serve citizens, not customers). 공무원은 고객이라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손님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시민 사이의 믿음·협동관계를 구축해야 함. 정부는 직접적인 고객(구매력을 가진 자) 이외의 사람들(약자)에게도 봉사하므로 형평성에 대한 요청을 져버려서는 안 됨.

⑤ **책임의 다원성 - 책임은 단순하지 않음**(Accountability isn't simple) : 정부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시장지향적·성과지향적인 이윤 추구·달성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 공동체가치, 정치규범,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이러한 다면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와 토론을 거쳐야 함.

⑥ **생산성(능률성)보다는 인간적 가치(민주성) 중시**(Value people, not just productivity). 생산성 개선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통한 관리를 강조. 공공조직이나 공공조직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공유된 리더십**과 협동의 과정을 통해 운영될 때 성공할 수 있음.

⑦ **기업가 정신보다는 citizenship(시민정신·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의 가치 중시**(Value citizenship and public service above entrepreneurship) : 공익은 공공자금을 그들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는 기업가적 관료에 의해 확보되기보다는 사회에 대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시민과 관료들에 의해 더 잘 증진될 수 있음. 공무원은 거버넌스 과정의 책임 있는 참여자이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님. 공무원은 공적자금의 관리자, 공공조직의 유지자, 시민정신과 민주적 담론의 촉진자, 공동체가 성립되게 하는 촉진자, 일선업무의 지도자(street-level leader ; 길바닥 수준의 리더, 시민에 근접한 일선의 리더)로서 역할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할 책임을 짐.

4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②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한다.
③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격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조한다.
⑤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해설

① (○) 신행정론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의 주도적·적극적 역할(목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을 강조하는 행정 우위의 정치·행정1원론이다. 행정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동대응능력과 새로운 사회의 설계를 위한 변화담당자(change agent)로서의 능력 및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② (○) 오스트롬(Ostrom)은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제가 상하관계 중심의 계층제 구조를 통하여 국가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윌슨적 행정관(Wilsonian perspective)을 비판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스트롬은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결정·공급은 단일의 권력중심체제가 아닌 분권화된 다양한 결정중심체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다중공공관료제(multiple public bureaucracy)를 주장하였다.
③ (○)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 산업화의 성숙, 기술관료제 이념, 선거에 기초한 절차적 민주주의 이념이 문화적·정치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의 조건을 설명하고 처방하는 관점. ㉡ **이성과 과학 중시** : 합리성·객관성·실증성을 강조하는 이분법적 경계(이성과 감성, 정신과 물질, 사유와 감각 등)를 지님. ㉢ **보편주의·근원주의·근본주의** :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이론의 존재를 중시. ㉣ **객관주의, 실증주의** : 객관적 실재와 이에 대한 실증을 중시.	㉠ 모더니티의 핵심가정인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나 객관주의·경험주의적 접근방법을 거부하고 해체**하려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 ㉡ 과학적 지식만이 확실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과학주의적 주장에 반대.** ㉢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절대주의에 회의(懷疑)를 갖고 **진리의 기준은 맥락의존적**(context dependent ; 상대적)이라고 보며 **거시이론·거대설화[메타설화]·거시정치 등(보편주의·근원주의)을 부인하고 다양성·상대성 중시.**

모더니즘	통합	분화 (분업)	구심적/획일화/집중화 /전체성/질서	이성	절대주의, 보편주의 근원주의, 근본주의	과학주의 객관주의	안정된 존재와 결과 중심	집단주의 획일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분열 다양화	탈분화 (협력)	원심적/다원화/분산화 /파편성/무질서	감성 정서	상대주의, 다원주의 맥락의존성	구성주의 주관주의	행동과 과정 중시	해방주의

④ (×) 제시된 내용은 신공공서비스론의 내용. 신공공서비스론은 공무원은 고객이라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손님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시민 사이의 믿음·협동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는 직접적인 고객(구매력을 가진 자) 이외의 사람들(약자)에게도 봉사하므로 형평성에 대한 요청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⑤ (○)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인간의 관계에서 제도의 종속변수성과 독립변수성을 모두 인정.

답 ④

5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③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
④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해설

① 입법통제, ② 사법통제, ③·④ 민중통제는 외부통제 /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는 내부통제

답 ⑤

행정통제의 유형

외부통제	공식통제	입법통제	① 입법권에 의한 통제 : 법률 제정·개폐, 조약체결·비준 동의 ② 재정운영 통제 : 예산 심의·의결, 결산승인, 기채(국채발행) 동의 ③ 국정운영 통제 : 국정조사·국정감사권, 주요 인사 임명동의·해임건의·탄핵소추·인사청문, 정책 질의·질문, 청원의 처리
		사법통제	① 법원의 행정소송과 명령·규칙 위헌심사 ②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위헌법률심사·권한쟁의심판 등
		옴부즈맨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속·저렴한 해결, 간접적 통제권만 가짐
	비공식통제	민중통제	정당, 이익집단, NGO(시민단체), 언론·매스컴, 인터넷, 여론, 정책공동체, 시민참여·주민참여, 선거·투표(선거·투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비공식통제인 민중통제로 분류) 등에 의한 통제
내부통제	공식통제	통제주체별	① 행정수반(대통령),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공직복무관리관) ② 계층제를 통한 감독자에 의한 통제(headship, 행정적 권위 활용) ③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감사원의 결산검사, 회계검사, 직무감찰) ④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행정심판) ⑤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중앙행정심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처리) ⑥ 교차행정조직(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⑦ 중앙통제(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감사, 지방채발행 승인 등)

		통제 내용별	① 정책 및 기획통제 : 국무회의(주요 정책 심의), 차관회의(조정 및 협의) ② 운영통제(관리통제)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정책품질관리 및 차관회의 주재 ③ 요소별 통제 : 법제통제(법제처), 예산통제(기획재정부), 정원통제(행정안전부), 인사통제(인사혁신처), 물자통제(조달청), 홍보(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로 교차행정조직에 의한 통제 ④ 절차통제 : 보고, 지시, 내부결재제(품의제), 장부 통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⑤ 감찰통제 : 행정감사, 회계검사, 직무감찰
	비공식 통제	① 공직윤리·행정윤리(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통제 ② 행정조직 내의 비공식적 조직,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③ 공무원단체(부정부패의 내부견제, 정실인사 비판 등) ④ 대표관료제 ⑤ 행정문화 : 조직 내 하위문화에 의한 통제	

6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이다.
②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③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④ 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해설

⑤ (×)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부패 등을 외부에 폭로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내부고발자의 폭로행위를 보호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부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핵심요소인 고발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포상·보상을 규정).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 민간부문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도 보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특징

㉠ **내부자에 의한 자발적 부패통제** : 조직 내부자에 의한 자발적·양심적 의지실현에 바탕을 둔 부패통제 노력.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고발행위도 포함.
㉡ **이타주의적 외형과 실질적 동기의 다양성** : 내부고발의 외형은 공익을 위한 이타주의적인 것으로 제기되지만 고발의 실질적 동기는 다를 수 있음(기회주의적인 자기이익추구 동기일수도 있음). 내부고발의 숨겨진 동기와 상관없이 부패의 폭로 사실에 입각하여 윤리적 또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고발이라는 외형이 갖춰지면 내부고발은 보호 대상이 됨.
㉢ **비공식적·비통상적 경로** : 조직 내부의 공식경로를 거치지 않고 언론제보나 공익단체에의 호소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외부에 공표. 조직 내 합법적·통상적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는 내부고발로 볼 수 없음.
㉣ **다수에 의한 부패통제** : 다수의 눈에 의한 상시적 감시제도로서 감사나 사정기관의 비상시적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
㉤ **개방적·상향적 부패통제** : 부패방지 과정에 하위직 공무원,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부로부터 상향적으로 부패를 해체하려는 노력임.

답 ⑤

7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②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③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 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④ 정책평가의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요인, 성숙요인, 역사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① (×) 과정평가에 대한 내용임

•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구분	총괄평가	과정평가
의의	정책집행이 끝난 후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달성했는지** 평가(정책효과의 평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 적절한 지** 확인하고 정책수단에서 최종 목표까지 연계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평가.
평가자	정책프로그램의 **최종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외부평가자**에 의해 수행됨.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주로 내부평가자와 외부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는 **정책프로그램의 지속·중단·확대 등 정책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활용**됨	평가결과는 정책집행에 환류됨

답 ①

8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②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③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외교·국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⑤ 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시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해설

①⑤ (○) **• 일반적인 정책의제설정 과정**

사회문제 social problem	개인문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결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주도자(initiator)와 점화장치(trigger device ;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극적인 사건)**

사회적 쟁점(이슈) social Issue	문제의 정의·성격·해결방법에 대해 집단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논쟁 대상이 되어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회문제. 사회문제는 주도자와 점화장치가 있어야 사회적 쟁점화 될 수 있음.

⇦ **공적 관심의 공유**(shared perception)

공중의제 public agenda	= **체제적 의제(systematic agenda)·토의의제·환경의제.** 많은 사람들(일반대중)이 관심을 갖고(공적 관심),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며(공유),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인정)하는 의제.

⇦ **정부의 공식적 인지·채택**

정부의제 governmental agenda	= **제도적 의제(Institutional Agenda)·행동의제·공식의제·기관의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인식한 문제',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

② (×) 외부주도형 ⇨ 내부접근형

③④ (○)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 과정 (R. Cobb, J. Ross, M. Ross)

구 분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동원형(Mobilization Model)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음모형)
의제설정단계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사회문제 ⇨ 정부의제**
문제전환 방향		환경(외부) ⇨ 정책결정자(내부)	정책결정자(내부) ⇨ 환경(외부)	양자 간 관계없음(내부 ⇨ 내부)
주도자		외부의 일반국민이 주도	내부의 최고정책결정자가 주도	내부의 주요 고위관료들이 주도
		비공식적 참여자 주도	공식적 참여자가 주도	
공개성·참여		높음	중간	낮음
사회특징		민주적 평등사회, 다원주의 사회	관료적 계급사회	통제적 불평등 사회(부·권력의 편중)
		주로 선진국	주로 후진국(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	
의제화 용이성		정책의제화 곤란(의사결정비용 많음)	정책의제화 용이(의사결정비용 작음)	
집행의 용이성		정책집행 용이(집행비용 적음)	정책집행 곤란(집행비용 많음)	
공중의제화		확산단계	진입단계	없음
정부의제화		진입단계	제기단계	제기단계
특 징		• 강요된 정책문제(pressed issue) • 정책내용이 비분석적·비체계적임 • 다수의 이해관계 조정·타협 • 공익-과정설, 점증주의, 포자모형	• 선택된 정책문제(chosen issue) • 정책내용이 분석적·체계적임 • 소수의 결정과 적극적 공중의제화전략- 행정 PR과 동원 활용	• 공중의제화(행정PR·동원) 없음, 일반국민에게 알리지 않음 • 내부적 흥정 : 정치자금의 제공, 특정인사의 보장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1987년 6·29선언, 복수노조 인정, 교원노조 허용, 1965년 한일어업협정, 군필자 가산점 위헌판결, 그린벨트 해제, 지방자치 실시, 벤처산업육성, 개방형임용제, 전자상거래 등	4대강사업(이명박), 도로명주소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새마을운동, 가족계획사업,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올림픽·월드컵유치, 제2의 건국운동(김대중), 경차보급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전철 건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 그린벨트 지정, Jhonson정부의 빈곤퇴치사업.	기업정리시 인수자 선정, 관허사업자 선정, 외교·국방정책(차세대전투기사업 등 무기구매계약, 금강산관광, 대북지원사업), IMT(무선영상이동전화) 2000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계획, 마산수출자유지역 결정.
단계	제 기 (주도)	환경에서 논제 제기 (개인·집단의 고충 표명)	정부 내에서 논제 제기 ⇨ **정부의제화** (정책결정자가 새로운 정책을 공표)	정부 내에서 논제 제기 ⇨ **정부의제화** (정책결정자나 측근자가 정책안 제시)
	구체화	매스컴·이익집단 등이 논의를 구체화(고충을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로 전환, 대안의 제시)	정부가 구체화 (공표된 정책의 세부 항목 결정)	정부가 구체화 (일반적 대안을 구체적 대안으로 전환)
	확 산	다른 환경집단에게 논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 **공중의제화**(대중매체·상징 활용)	관주도 하에 공중에게 정책의 중요성·유용성을 인식시킴(대중매체·상징 활용)	없음
	진 입	공중의제의 **정부의제화** (정부기관의 관심 표명)	정부의제의 **공중의제화** (정책에 대한 공중의 지지 표명)	없음

답 ②

9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②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③ 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을 갖는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해설

① (×) 상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②③ (○) **정책집행의 하향정 접근방법** : 정책집행의 실패를 막고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전략**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로 **바람직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정책 중심, 정책결정자 관점). 정책집행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수단적 행위로 인식하므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정책과 집행의 완전한 인과관계를 토대로 하며 단계를 중시하는 **'단계주의 접근' – 합리모형의 선형적(단계적) 시각 반영.** ③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의를 출발하여 **바람직한 집행은 정책결정의 내용을 충실히 실현시키는 과정**이라고 봄.
④⑤ (○) **•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이상적 조건(하향적 접근) -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어(D. Mazmanian)**

㉠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일 것.
㉡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지니며,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법적 구조화**).
㉢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할 것.
㉣ 결정된 정책에 대해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 지지**를 받을 것
㉤ **정책목표는 안정적**이어서, 집행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상충되는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정책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을 것

답 ①

10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 선택적 익명 ○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 양극화된 통계처리 ○ 구조화된 갈등유도

① 시계열분석기법 ② 시뮬레이션 ③ 정책델파이 ④ 교차영향분석 ⑤ 실현가능성분석

해설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의의	• 전통적 델파이의 한계를 건설적으로 극복하여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맞는 정책대안의 탐색·개발과 결과예측 방법으로 만들어 낸 것. • 정책델파이의 목적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관련자로서의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혜를 모으려는 일반적인 델파이의 목적과는 다르다.
특징	① **선택적 익명성 : 초기에는 익명으**로 의견 제시,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 간 공개토론 허용. ② **유도된 의견 대립(구성된 갈등)** : 일부러 갈등을 조성하고, 그로부터 대안이나 대안 결과에 대한 창의가 나오길 기대함. 더 창의적인 idea 개발을 위해 각 전문가의 견해와 상호불일치한 산출을 개방. 주요 정책이슈의 잠정적 해결책에 대해 있을 수 있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창출. ③ **차이를 부각시키는(양극화된) 통계처리** :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수치 사용. ④ **양식 있는 많은 주창과 정책관련자의 의견 중시** : 참가자 선발시 전문성 자체보다는 흥미와 식견에 바탕을 두며, 참여범위가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정책관련자까지 포함하여 넓어짐. ⑤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한 회의방식도 활용**

구 분	전통적 델파이(일반델파이 conventional delphi)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적용영역	일반문제(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에 대한 예측
익명성	철저한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중간에 상호교차토론 허용)
통계처리	통계처리를 통한 의견의 평균치·중위(衆位)값 발견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된 통계처리
합 의	전문가 간 합의(근접된 의견)의 도출	구성[조성]된 갈등 – 극단적·대립적 견해의 유도와 존중
응답자	동질적 정책전문가를 응답자로 선정	정책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정책관련자 등 다양한 응답자 선정
토 론	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방식, 대면토론도 활용
유사점	주관적 예측기법, 다수의 응답자 선정, 반복과 통제된 환류, 의견의 통계 처리	

답 ③

11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③ 모든 욕구는 충족되면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④ 동기요인에는 보수, 신분보장,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이 포함된다.
⑤ 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다.

해설

①② (×) A. Maslow는 5개 욕구계층을 나누고 하위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 상위욕구가 발현된다고 봄(순차적·상향적·단계적 욕구발현).
③ (×) F. 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은 충족되어도 불만만 제거되며 만족을 가져오지 못하므로 동기부여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봄. 만족요인(동기요인)은 충족시 만족을 가져오므로 동기부여로 직접 연결된다고 봄.
④ (×) 보수, 신분보장,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은 불만(위생)요인.

허즈버그의 불만요인과 만족요인

불만요인(dissatisfier) = 위생요인(hygiene)	만족요인(satisfier) = 동기요인(motivator)
• 불만 유발 또는 불만 해소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 관계 없음**(필요조건에 불과). • 불만요인 제거시(충족시) 불만 없는 상태가 됨. • 불만요인 제거시(충족시)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음.	• 만족 또는 직무수행 동기유발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됨**(충분조건). • 만족요인 불충족시 만족 없는 상태가 됨. • 만족요인 불충족시 불만으로 연결되지 않음.
• **환경·직무수행상황** vs 조직구성원 • **직무 외적이고 물리적·환경적인 요인**	• **직무 자체** vs 조직구성원 • **직무 내재적·심리적 요인**(내적 보상·자아실현)
조직의 정책·관리·관행·규칙, 감독(리더십의 질), 근무환경·작업조건, **안전**, 근무시간, 지위나 직위, 정년, **신분안정**(직업적 안정), 복지시설, **보수**, **대인관계**(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직무상 성취감(자아실현)·**인정감**, 직무자체·직무내용(보람 있고 도전적인 일), 개인의 성장(**승진**)·발전·자아개발,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 직무성과, 직무상 책임 증대, 칭찬

⑤ (○) • **욕구이론 비교**

McGregor	X이론			Y이론		Z이론
Lundstedt	권위형·독재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Ramos	작전인(operational man)			반응인(reactive man)		괄호인
Argyris	미 성 숙 인			성 숙 인		
Likert	권위형 – System Ⅰ·Ⅱ			민주형 – System Ⅲ·Ⅳ		
Maslow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애정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욕구	
Schein	경제인·합리인	사회인		자아실현인		복잡인
Alderfer	존재·생존(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		└ 상황이론
Herzberg	불만·위생요인			만족·동기요인		
McClelland		친교·소속욕구		권력욕구	성취욕구	
이론적 배경	고전적 조직론, 과학적 관리론			현대조직론, 후기인간관계론		
동기부여	물질적 욕구, 하급욕구			정신적 욕구, 고급욕구		
Leadership	독재형·권위형 – 직무·과업·업무중심 리더십			민주형 – 인간·부하·관계중심 리더십		
Golembiewsky	압력(Push)이론 – 관료제			견인(Pull)이론 – 탈관료제		

답 ⑤

12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메이요(E. 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⑤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해설

① (○) 비공식조직은 사회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작업의 생산성과 밀접하게 관련됨.
② (○) E. Mayo의 Hawthorne 실험 : 과학적관리법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으나, 인간심리상태의 중요성을 발견. 생산량은 일방적인 지시나 종업원의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 사회적 상황(직장에서의 감정, 희망, 가치관, 불안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 태도나 감정에 의한 생산성 변화
③ (×) ⑤ (○) 인간은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인 경제적·물질적 욕구보다는 사회심리적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았다.
④ (○)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감정적·정서적·사회심리적적 요인에 입각하여 인간을 관리하여 생산성·능률성을 향상시키려는 이론. 조직관리의 민주화·인간화를 강조하나, 궁극적인 목적은 능률성·생산성의 향상에 있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궁극적 목적은 생산성(능률성)으로서 동일하다.

답 ③

13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기능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⑤ 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해설

① (×) 독임제(단독제)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합의제 조직은 의사결정권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는 위원회 등의 조직 형태

② (○) **행정위원회** :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로 부와 국을 가지고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 권한 행사를 하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 의사결정권(의결권)과 집행권을 지님. 준입법권 및 준사법권을 가지며,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예 소청심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③·④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행정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며, 국민 위주 행정서비스 공급(고객위주 행정),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대응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에 의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⑤ (×) 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탈관료제 구조, 유기적·적응적·동태적 구조).

답 ②

14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구조 ② 계층구조 ③ 문서화된 법규
④ 실적주의 ⑤ 정의적(personal) 업무처리

해설

① (○) **전문화와 분업** : 자격이나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름. 자기가 맡은 분야의 유능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해 분업화된 직무를 맡김. 사람의 전문화와 일의 전문화(분업)는 업무의 능률성을 높임.

② (○) **계층제[계서제]** : 모든 직위는 피라미드식의 계층 내에 배치되며 상하위 계층은 질서정연한 명령복종체계 구성(엄격한 수직적 업무배분)하고 실적에 대해 한 명의 상관에게 책임을 짐. 계층제의 상명하복체제는 집권적 구조를 형성하고 업무능률을 높이며 정책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함. 또한 질서유지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계층제를 통한 승진은 권력욕구와 성장욕구를 만족시킴.

③ (○) **문서주의** : 모든 직위의 업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문서로 이루어지고 문서로 보관됨. 문서화는 업무의 지속성·계속성·안정성을 유지해주고 객관성·정확성·책임성·예측가능성을 높임.
법규에 의한 지배(합법성·공식성) :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며(직위와 [행정수단] 소유의 분리, 직책의 사유화 불허) 권한 남용이나 임의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짐.

④ (○) **능력(기술적 전문성)에 의한 채용** : 모든 직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관료가 담당하며 관료의 채용은 세습·정실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정치적 전문성 ×)이나 전문능력에 의해 시험·자격증 등 기술적 기준을 통해 공개적으로 채용.
cf) 봉급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지위·기능·근무연한이며 주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 연공급 지급 / 승진은 실적과 연공을 기준으로 함.

⑤ (×) **비정의성(非情誼性 ; impersonality - 비사인성·몰개인성·몰주관성·비개인성), 공·사(公·私) 구별** : 관료들은 공식적 업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나 기호의 영향을 받거나 주어서는 안 됨(영혼이 없는 관료). 비정의성은 권력자의 인격적 지배를 방지하며 개개인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여 합리적·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절차적 정의를 가능하게 함.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되어 사적인 감정을 공적 업무 수행에 연결시키지 않음(공과 사가 구분되지 못하던 가산관료제와는 다름).

답 ⑤

15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③ 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⑤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해설

③ (×) 계급제 ⇨ 직위분류제
- **계급제(Rank Classification System)** : 학력·경력·자격·능력과 같은 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rank-in-person)을 기준으로 유사한 개인의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나 집단으로 구분하여 계급을 형성하는 제도.
-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 직무(Job) 또는 직위(Position)라는 관념에 기초하여 직무의 종류·성질에 따라 직류·직렬·직군별로 수직적 분류 후, 직무의 곤란도(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급·등급별로 수평적 분류.

답 ③

16 **국가공무원법 상 우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③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④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해설

② (×) 명예퇴직(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의 경우에 인정됨.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명예퇴직**

답 ②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은?

○ 주요과업 분야별로 바람직한 행태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제시한 뒤, 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관찰하여 해당사항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 척도의 설계과정에 평정대상자를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정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
○ 직무가 다르면 별개의 평정양식이 있어야 하는 등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① 중요사건 기록법 ②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③ 서열법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 ⑤ 도표식 평정척도법

해설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BARS ; Behavioral Anchored Rating Scale)

① **의의 : 도표식 평정척도법 + 중요사건기록법.**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평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행태(중요 사건)를 서술적 문장으로 평정척도를 표시한 평정도표(행태적 길잡이)를 사용.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job)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task) 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중요 행태는 중요사건기록법에서 idea를 얻을 수 있음).

사례－평정요소 :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성(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난에 체크 표시)

등급	행태 유형
(　) 6	부하직원과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　) 5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　) 4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 가끔 잘못된 문제를 초래한다.
(　) 3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　) 2	부하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　) 1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결정을 회피하거나 계속 미룬다.

② **장점** : 평정척도는 피평정자(직무수행담당자)와 계선상의 관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계하므로 신뢰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 주관적 평가의 오류 가능성 최소화.

③ **단점** : 동일 직무라도 과업마다 별도의 행태기준을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어느 하나의 행태만 선택하라는 것은 인간행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호배타성을 전제로 하므로 설득력이 약함(인간은 바람직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임).

행태관찰 척도법 (BOS ; Behavioral Observation Scales)

① **의의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처럼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한 구체적 사건·사례를 기준으로 평정하지만, 등급은 도표식평정척도법과 유사하게 **사건의 관찰 빈도 수를 표시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주요 행태별 척도를 제시한 뒤, 해당 척도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사례－평정요소 : 부하직원과의 의사소통

평정항목	등급(관찰빈도) 거의 관찰 못함				매우 자주 관찰
새 정책이나 내규가 시행될 때 게시판에 게시한다.	1	2	3	4	5
주의력을 집중하여 대화에 임한다.	1	2	3	4	5
지시사항을 전할 때에는 구두로 한 것을 다시 메모로 전달함으로써 확인한다.	1	2	3	4	5
메모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는다.	1	2	3	4	5
상부 지시사항을 즉시 전하지 않고 며칠 지나 전함으로써 일을 서두르게 만든다.	1	2	3	4	5

㉡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의 단점인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간 상호배타성 극복을 위해, 행태별 척도 제시.**

㉢ 선정된 평정항목은 모두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직무에 능통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하게 되며, 시험의 내용타당성 확보와 유사한 논리).

② **장점 : 평정요소와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평정결과를 통해 평정대상자에게 **행태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환류**시켜 줌. 도표식평정의

평정요소의 추상성을 해소하고 등급 간 막연한 탁월·우수·보통 등의 평가가 아니라 평정항목의 행동이 **얼마나 자주 관찰되느냐를 기준으로 하므로 평정자의 주관성·임의성을 줄임.**
③ **단점** : 행태의 정확한 관찰이 곤란하므로 도표식의 **등급 간 구분의 모호성과 연쇄효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답 ②

18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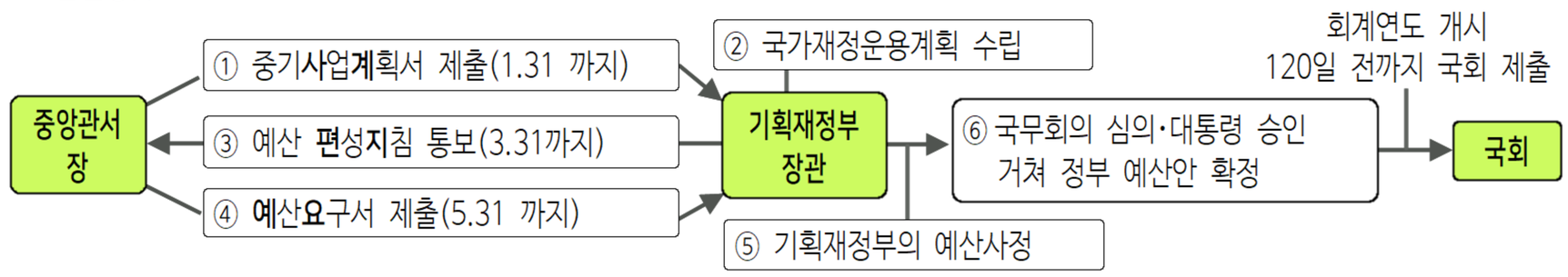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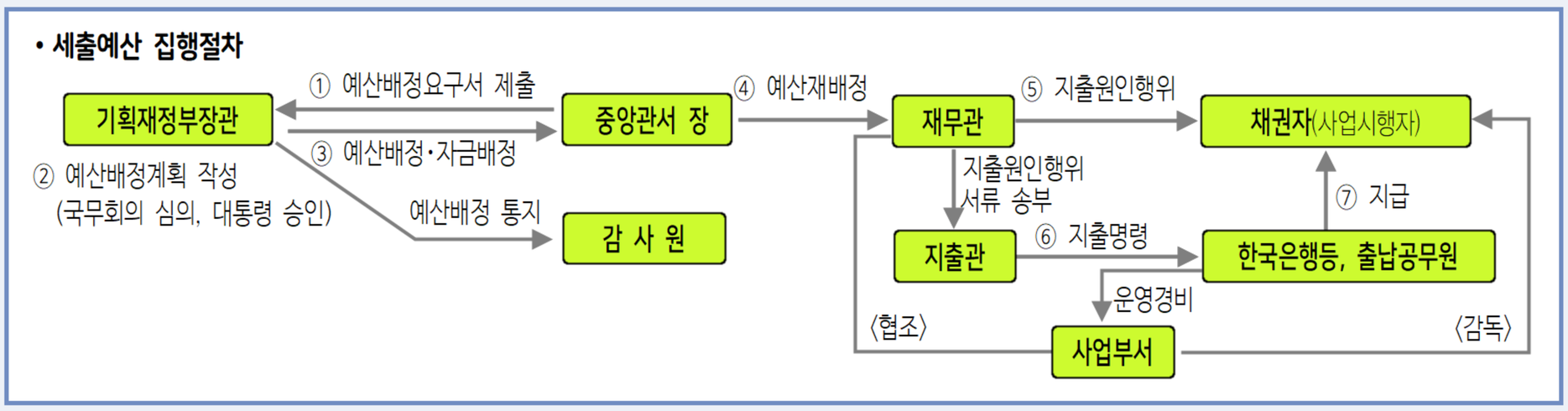
㉠ (×) 각 중앙관서 장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이 예산편성절차의 시작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절차



㉡ (○)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월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12월 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함(예산안 제출기한을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심의기간 연장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제33조)하여 법정 심의기간은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증가시킴).
㉢ (○)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 – 예산 확정(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1일]까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 ⇨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성에 장에세 분기별로 예산 및 자금배정(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긴급배정 가능)



답 ③

19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③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④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⑤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해설

① (×) 특별회계는 정부 예산의 기본계정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되는 세입·세출예산. 국가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이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자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성을 확대하며, 적극성·창의성 도모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가져온다.

②④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단일성 원칙의 예외**,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되므로 **통일성 원칙의 예외**,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므로 완전성 원칙에는 합치됨.

③ (×) 법률로써 설치하며 설치 근거 법률은 국가재정법 별표1에 명시.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⑤ (○) **• 특별회계의 장·단점**

장점 필요성	㉠ 특정사업의 안정적 추진 ㉡ 정부가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사업의 수입·지출(수지)을 명확히 하고 경영성과를 파악하여 경영 합리화 가능 ㉢ 행정기관의 재량성·자율성 확대, 적극성·창의성 도모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 ㉣ 행정기능의 전문화·다양화에 부응.
단점 문제점	㉠ 예산규모 복잡화와 재량성의 인정으로 의회에 의한 재정통제 약화 ㉡ 회계가 복잡해져 유사기능을 다른 회계와 중복 수행할 수 있고 통제가 곤란해 예산팽창(예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음 ㉢ 회계 간 내부거래가 존재하므로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저해함 ㉣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 국한하여 사용 되고(재정의 칸막이현상) 지출목적이 정해진 경비가 많아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킴(단, 우리나라는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 예산제도의 복잡화로 인해 국가재정의 전체적 관련성이 불분명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함

답 ⑤

2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화·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② 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③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④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해설

① (×) 제외한 ⇨ **포함한**
② (×) 국권설 ⇨ **고유권설**
④ (×)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일반적 현상이던 자연법론의 쇠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프랑스 지방권사상에 기초를 둔 **고유권설도 점차 퇴조**하게 되었다.
⑤ (×)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자치권의 본질

고유권설 (지방권설, 독립설, 확인설)	• **주민자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의 고유한 정치적 지배권을 향유한다고 보는 이론. • 프랑스 지방권사상(프랑스혁명 시기 뚤레[Thouret]의 주장)을 기초로 확립. • **자연법 사상과 역사적 연유관**에 기반. – **자연법사상** : 사람이 천부의 기본권을 가진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고유한 지방권을 가지므로 국가권력으로 이 권리를 침범할 수 없음. – **역사적 유래관**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리를 인수한 것으로 봄.
전래권설 (국권설, 수탁설)	**단체자치와 관련**. 자치권은 국권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봄(19C 후반 독일 공법학자들의 주장). 근대의 지방자치는 민족통일국가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률의 창조물이며 고유사무가 설정되어도 국가 법률에 의해 수탁된 결과이고, 사무집행시 국가의 강력한 감독을 받음. 단, 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권리로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임.
제도적 보장설	• 전래권설 처럼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는 주장(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님). • 독일의 칼 슈미트(Carl Schmitt)에 의해 확립,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중심으로 설명되며 오늘날의 다수설. • 지방자치를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존폐는 오직 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고, 입법에 의해 변경할 수 없게 함.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방자치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헌법적 보호가 부여됨(지방자치행정을 법률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

답 ③

21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 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① 포괄성의 원칙 ② 가외성의 원칙 ③ 효율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충분재정의 원칙

해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의 보충성(subsidiarity) 원칙

㉠ **의의** : 사무분배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담당하게 하되, 자체적인 처리 곤란시 광역자치단체, 국가 순으로 담당한다는 원칙. 199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해 유럽연합 국가 중심으로 확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 1985년 규정, 우리나라도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 추진로드맵에서 지방분권과제 추진 3대 원칙 중 하나로 보충성 원칙을 제시한 바 있고,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법」에도 규정.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보충성 원칙은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지방단위에서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은 지방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에 한해 보충적 수준에서만 인정된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자치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에 대해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 **보충성 원칙과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보충성 원칙은 기초자치단체의 권리를 일종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므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보다 훨씬 강력한 입장이다. 보충성 원칙에 의하면 모든 공공사무의 처리권한이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게 속하므로 국가사무로 분류해 국가가 처리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국가는 그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 내용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	**기초정부(기초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 간 사무배분시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리·공간적으로 가까운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 상위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며, 업무처리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인 사회구성단위의 활동을 파괴·박탈하면 안 된다.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	상급정부(상급공동체)는 기초정부(기초공동체)가 어떤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하여 곧바로 기초정부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업무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기초정부가 1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하위의 정부가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상위의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 즉 상급정부는 필요한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

답 ④

22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②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④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⑤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해설

① (×) 지방교부세 ⇨ 지방세
② (×)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독립적 노력과 절차에 의한 수입으로서 자주재원(자체재원).
③ (×)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므로 자체수입(자체재원)이 아니라 이전수입(이전재원, 의존재원)이다.
• **지방재정지표상 자체수입(자체재원·자주재원)**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우리나라 지방세입의 분류

자체수입 (강학상 자주재원)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대금,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기타 수입(불용품 매각수입,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이전수입 (강학상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채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보전수입·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예치금 회수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예수금]	

④ (○) • **지방세입**(地方歲入)**의 분류** (*지방세입 : 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1회계연도 동안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

수입의 결정·실현의 주도성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기능을 직접 행사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 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자주재원 비중이 클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안정적임.
	의존재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는 재원 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목적·용도의 한정성	일반재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예 지방세 중 보통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일반재원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의 융통성·재량성이 높아 재정운용의 자주성을 높임.
	특정재원	지출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재원 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수입의 안정성과 규칙성	경상재원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 예 지방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수료·사업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	경상적 지출을 경상재원으로 충당시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며, 임시수입으로 충당시 재정건전성은 낮아짐
	임시재원	회계연도마다 불규칙적·임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 예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부담금(분담금 포함)·지난 연도수입·과징금·과태료·기부금 등	

⑤ (×)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답 ④

23 전자정부법상 (㉠)과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① ㉠ : 정보자원, ㉡ : 정보통신망
② ㉠ : 정보자원, ㉡ :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 : 정보시스템감리, ㉡ : 정보통신망
④ ㉠ : 정보시스템감리, ㉡ : 정보기술아키텍처
⑤ ㉠ : 정보기술아키텍처, ㉡ : 정보통신망

해설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14. "**정보시스템 감리**"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①

24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다.
②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③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④ 김영삼 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⑤ 김대중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해설

① (×) • **감찰위원회** : 공무원의 위법·비위 행위 조사와 정보수집, 공무원 징계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 요청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1948.7.17.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1955.2.17. 폐지, 1961.1.14. 부활, 1963.3.5. 심계원과 통합하여 감사원으로 개편되면서 폐지. 제2공화국 시기(1960.6.15.~1961.5.16.)에는 존재했던 기관이지만 경찰중립화를 위한 기관은 아니었음.
• **공안위원회** : 경찰중립화를 위해 설치하도록 1960.6.24. 정부조직법에 명문 규정을 두었으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공안위원회를 두는 경찰법안이 3차례 제안되었지만 모두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됨(결국 공안위원회는 구성·운영되지 못했고 이후 정부조직법 상 근거 규정도 폐지됨).**

②⑤ (○) • **역대정부의 행정개혁**

제1,2공화국		국가재건과 질서회복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
제3,4공화국		경제발전을 위한 행정개혁 시도. 총리실산하의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주도
제5공화국		간헐적인 공무원 감축과 행정개혁 시도. 총무처 산하의 **행정조사연구실**이 행정개혁 담당.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행정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14개월 존속. 민간인 차원에서 개혁에 관한 건의서가 만들어짐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행정쇄신위원회**가 5년간 존속. 작은 정부와 민주화 추구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민주화와 시장경제 동시 추구.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조치 채택. 상설적인 개혁조직(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을 통해 개혁의 추진력 확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 정책평가위, 반부패특별위 등 혁신기구 설치.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김영삼·김대중 정부 하에 확대일로에 있던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속도 조절 뉴거버넌스 이론 하에 혁신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혁신 주관
	이명박 정부(실용정부)	전형적인 작은 정부와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행정개혁 추진. 국정노선은 진보에서 보수로, 평등에서 자유로, 분배에서 성장으로 이동(성장을 통한 분배의 개선 강조).

③ (○) 서정쇄신(庶政刷新)운동은 제4공화국(1972.12.27.~1981.2.24.)시기 1975년도부터 시작된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진작시키려던 정신개혁운동.
④ (○) 김영삼 정부시기(1993.2~1998.2)에 개인정보보호법(1994), 행정절차법(19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1997. 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답 ①

25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중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 ② 과정적 접근방법 ③ 기술적 접근방법
④ 조직문화 접근방법 ⑤ 행태적 접근방법

해설

•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은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은 조직문화적 접근이다.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구조적 (제도적) 접근방법	**공식적·합리적 조직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예 원리전략, 분권화 전략 등), **공식적 조직의 내부구조를 개선·합리화.** * Hoover위원회의 활동,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 **관련이론 : 고전적 조직론, 원리접근법, Weber의 관료제론** * **원리전략**(최적 구조의 설계) :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 수행을 가져온다는 전략. 기능중복 제거, 책임 재규정, 조정·통제절차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 * **분권화 전략** : 조직이 분권화되면 계층이 줄고 명령과 책임 계통이 분명해져 막료서비스가 확립될 수 있음. 공식조직뿐 아니라 관리자의 행태와 의사결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님.
	① **구조·직제 간소화, 기능중복 제거** ② **명령계통·통솔범위 조정 등 조직원리 적용** ③ **행정사무의 적절 배분, 권한·책임 명확화, 책임의 재규정** ④ **집권화 또는 분권화의 확대** ⑤ **의사전달[의사소통] 체제의 개선** ⑥ **의사결정권한의 수정** ⑦ **조직의 통·폐합,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 **단점** ① 개도국에서는 구조와 현실적인 기능과의 불일치(형식주의)가 심하여 적용 곤란. ② 조직 내부 구조만 중시. 인간적·행태적 요인이나 조직단위 간 권력관계 등을 과소평가. ③ 조직의 동태적 성격과 환경적 요인 경시.

관리 기술적 (과정적 ·절차적) 접근방법	행정과정에서 사용하는 **행정기술·장비·수단 개선, 계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행정체제의 **과정, 업무처리 절차나 운영기술, 일의 흐름 개선** ① **업무·기술·절차·장비의 전문화·기계화·표준화** ② **OR(관리과학·운영연구)·SA(체제분석), 행정전산화(OA, EDPS), 정보시스템(PMIS) 등 과학기술 활용** ③ **직무분석·직무평가, 문서양식 개선, 사무관리, 정원관리, 봉급책정** ④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 BPR), 행정민원절차의 간소화**	• **관련이론 : 과학적 관리론, 관리과학, 체제분석, 계량화모형** • **장점** : 업무수행의 능률성 제고와 성과향상, 기술적 쇄신을 통해 표준적 절차와 조직의 과업수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조직행태와 인간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점** ① 계량적 기계모형, 현실세계를 너무 단순화시켜 파악, 기술과 인간성 간의 갈등을 경시. ② 구성원의 기술활용능력 부족시 적용 곤란. ③ 신생국은 기술적 접근을 활용할 여건과 전문인력이 부족.
인간· 행태적 접근방법	• **행정인의 가치관·신념·태도**를 인위적으로 조작적 전략이나 실험실 훈련 등에 의하여 변혁시켜 행정체제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접근방법 • 상황적·자발적 성격 ① **중요 의사결정에의 참여** ② **감수성훈련, 과정상담, MBO 등 조직발전(OD)기법** ③ **조직역학(group dynamics)**	• **관련이론 : 인간관계론, 행태주의, 행태과학** • **장점** :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 • **단점** ① 장기간 시간 소요(행태변동은 단기간에 곤란), 법적 제약. ②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의의 수용이 어려운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서는 곤란. ③ 비공식적 감정적 측면에 치중, 공식적 계층제적 성격이 강한 정부조직에 전면 적용 곤란.
통합적 종합적 접근법	통합적·총체적 개선(구조+기술+행태). 개방체제 관념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의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여러 가지 분화된 접근법을 통합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하려는 접근 방법.	• 전체적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는 체제이론·상황이론을 주요 기반으로 함 • **단점** : 개혁추진자들의 실천적 작업에 많은 부담을 줌
사업중심 접근방법	**산출/정책 중심적 접근.** 행정산출의 정책목표와 내용, 소요자원에 초점을 두어 행정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법. 정책분석과 평가, 생산성 측정, 직무감사, 행정책임평가 등이 주요 도구.	
문화론적 접근방법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 의식적·계획적인 개입에 의해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달성하는 것.	

답 ④